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토론



최충옥(진행자, 경기대 교수) : 정보사회의 구현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회적인 역기능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뉴미디어의 이용확산에 따른 사회적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방안을 모색코자 사업자,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개최한다.

김남호(이하 토론자, 서울 공보사 대표이사) : 현재 700번 사업자 400여명중 2~30명 정도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정보생성원과 판매가간의 격차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은 활성화되지도 않았는데 정보윤리는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 먼저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한 후 정보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김영길(부산 텔레콤 대표이사) : 대중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측면에서 정보윤리는 심의하는 분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정보윤리를 심의하는 지 모르지만 이분들에 의해 우리나라 정보문화의 발전방향과 속도가 좌우되고 있다. 우리도 건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정보윤리심의위원들의 시각도 변해야 한다.

김철균(나우콤 과장) : PC통신상에서 나타나는 정보윤리와 관련된 문제점은 예절규범의 미정립,

음란정보의 유통, 상용자료의 범람 등이다. 하지만 운영자 입장에서 상용자료 여부, 일반자료 규제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사회환경에 맞는 규범이 선언적이든 실질적이든 마련되어 이용자가 승복하고 운영자가 이 룰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옥순(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 : 정보사용자의 대부분은 청소년이다. 정보윤리 확립은 이러한 여건을 참고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윤리 확립에 대한 필요성만 거론됐지 구체적인 방법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듯하다. 정보윤리 확립을 위한 지름길은 교육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심층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윤리가 가정, 사회, 학교의 삼위일체로 정착되기 때문이다.

이미선(서울 YWCA 주부모니터) : 바람직한 정보문화 확산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부모니터로 유해정보환경을 감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법적규제 권한이 없다. 이에 청소년에게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